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가?

신광영

한림대학교수 사회학

현재 한국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관련하여 그리고 한국 사회 체제와
관련하여 개발독재로 대표되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연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지를 살펴본다.

서론

현재 한국 경제 위기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군사독재가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권위주의를 회구하는 사람들에게 박정희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위와 같은 주장은 다시 보수주의자들을 궁지로 몰아 넣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단 두 가지 대립되는 주장이 대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현재 한국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관련하여 그리고 한국 사회 체제와 관련하여 개발독재로 대표되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연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대단히 다른 여러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또한 경제 성장도 초기 단계의 문제와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서로 논의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하고 있는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논의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



사회 차원에서 집단적인 배제나 억압이 존재하여 특정한 사회집단이 이득을 누리고 다른 사회집단이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 이러한 사회는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다.

적인 논의를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의 역사적 관계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절차상의 제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선거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제도이긴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본래의 의미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들이 필요하다. 먼저 민주주의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정치 참여를 구현하는 제도라면 정치 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도 민주주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 사회 차원에서 집단적인 배제나 억압이 존재하여 특정한 사회집단이 이득을 누리고 다른 사회집단이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 이러한 사회는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은 정치 수준에서만 아니라 사회 수준에서 존재해 온 사회적 배제나 억압을 제거해온 과정이었다. 초기 영국의 민주주의는 “주식회사형 민주주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참정권을 가졌던 정치체제였다. 그러므로 재산이 없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참정권을 갖지 못했다. 이러한 형태의 선거제도가 유럽의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19세기 유럽 노동운동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보를 위한 정치투쟁으로 나타났다.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1910년대와 192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었다. 영국의 경우 1918년 21세 이상의 성인 남성에게 그리고 1928년에 이르러서야 21세 이상의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보장되었다. 그 결과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에서 민주주의는 20세기의 산물이

었다. 봉건귀족이나 지주들에 의해서 독점된 권력이 신흥 산업 부르조아지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고, 다시 귀족과 지주의 권력을 대체한 신흥 부르조아지의 권력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연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진화해왔다.

서구의 경우 민주주의의 발달과 자본주의의 경제 발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민주적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었다. 정치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세 가지 점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첫째 노동계급

의 정치참여가 생산방식의 혁신을 촉진시켰다.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만들어져 노동자들의 이해가 정치적으로 대변되기 시작하였고, 부르조아지에 의해서 독점되었던 정치의 장이 점차 노동계급 정당들에 의해서 장악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면서 자본가들은 과거와 같이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경제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발달로 별다른 기술혁신이 없이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던 생산이 점차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주의의 발달로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치적으로 반영되면서

노동착취형 생산방식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면서 기술혁신에 기초한 생산이 발전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변화는 노동조합의 합법화였으며, 노조운동의 합법화가 기업 조직의 혁신을 촉진시켰다. 기업의 생산성은 한 편으로는 시장 경쟁을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압력에 의해서 향상되었다. 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또한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을 이윤을 통해서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

기 때문에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기업 조직 수준에서도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져 왔다. 기업의 기술혁신과 조직혁신은 노조운동이 직접적으로 특정 기업의 혁신을 추구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노조운동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나타났던 것이다. 오늘날 유럽의 경제가 보여주는 높은 생산성과 복지는 19세기 이래 지속된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인한 부수적인 결과이다.

셋째,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로 사회 수준에서 제도의 합리성과 체제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민주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전통적인 연고주의나 부정부패와 같은 비

오늘날
유럽의 경제가 보여주는
높은 생산성과 복지는
19세기 이래 지속된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인한
부수적인 결과이다.

합리성을 낳는 제도들이 개혁되었고 남녀 차별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케 하여 체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전통적인 인습과 권위주의 관행이나 문화를 약화시켜 경제 체제의 합리성 증대에 기여해 왔다. 서구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 성장을 보여주었던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가 비합리적인 사회제도와 관행을 타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형성, 발전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는 동유럽 사회주의권에서 형성된 생산체제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재벌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속성은 정치적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형성된 "연성 예산 제약형 기업(soft budget constrained firm)"과 동일한 것이다. 동유럽에서 형성된 연성 예산 제약형 기업은 도산하지 않는 기업이며 기업의 혁신이 없이도 기업이 팽창할 수 있는 독특한 유형의 기업들이다. 또한 시장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기업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시장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가격 설정자(price maker)인 경우 혹은 조세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기술 혁신에 대한 동기유발은 더욱 더

약화된다. 정치적인 거래나 뇌물을 통하여 조세감면이나 면제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기업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지원이나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 기업 확장은 오직 생산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서만 가능하다.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제약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은 "경성 예산 제약형 기업(hard budget constrained firm)"이라고 불린다. 슘페터는 이러한 기업을 자본주의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자본주의의 발전은 이러한 기업들의 혁신(innovation)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한국의 대재벌들은 슘페터가 제시하는 혁신에 기초한 경쟁적 자본주의 기업이라고 보다는 동구 사회주의 기업들이 보여준 연성 예산 제약형 기업에 더 가깝다. 기업이 시장 독점을 통하여 경쟁 가격 이상의 이익을 올릴 수 있거나, 국가로부터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경우 기업은 기술혁신을 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확장을 추구할 수 있다. 더구나 서구 기업들에게 기술 혁신의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하였던 노조운동도 국가의 탄압에 의해서 억제되었기 때문에 재벌 기업들은 혁신을 강요당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기술 혁신이 없이도 확대재생산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기술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에 기업은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 확장 대신에 외부 차입을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추구하였다. 재벌이 쉽게 자금확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채를 통한 기업확장(자산증가)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유난히 한국에서 대재벌이 형성될 수 있었던 요인은 개발독재를 주도했던 권위주의 국가가 재벌을 경제 성장의 파트너로 선택하였기 때문이었다. 한국과 유사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대만의 경우 국민당 정부는 재벌의 형성을 정책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대만의 경우 한국과 같은 재벌기업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3명의 군출신 대통령 시절 정부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은행을 국유화시켜 자

본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었고, 국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은행에 유입된 자금으로 특정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판치금융이 재벌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국가주도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정부와 재벌간에는 온정주의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기업들의 경우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협조적이지 않은 기업들은 도태되었다. 독재정권과 재벌의 결탁으로 재벌은 강력한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을 거듭하였다. 서구의 부르조아지와는 달리 한국의 부르조아지가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기여하기 못한

이유는 바로 독재정권에 의해서 키워진 부르조아지이기 때문이었다. 유럽의 역사에서 부르조아지가 구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민주주의의 싹을 키웠던 반면에 한국의 역사에서 부르조아지는 독재정권의 적극적인 지지세력으로 자리를 잡아서 민주주의

의 강력한 장애물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생산성이 1970년대 미국 생산성의 15% 내외에 불과하였지만, 미국 생산성의 30%를 상회하였던 남미와는 달리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보여주었던 이유는 한국의 저가 상품들이 판매될 수 있는 미국 시장을 확보하였기

때문이었다.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생산품이 미국의 가격경쟁시장에서 구매력을 확보하면서 한국 경제는 80년대 말까지 고도 성장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경우 광범위한 빈곤층(유색인종들이 주류를 이루는 언더클래스 underclass)이 존재하여 가격만 낮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격 경쟁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다. 미국의 소비재 시장은 물건값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질이 보장이 되어야 경쟁력을 갖는 품질경쟁시장이 중간계급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한국의 상품들은 저임금에 기초한 저가 상품들이어서 품질 경쟁시장이 아니라 가격경쟁시장에서 경

유럽의 역사에서 부르조아지가
구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민주주의의
싹을 키웠던 반면에 한국의 역사에서
부르조아지는 독재정권의 적극적인
지지세력으로 자리를 잡아서 민주주의의
강력한 장애물로 성장하였다.

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서구 경제가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졌으나, 한국의 경우 국가의 임금억제 정책을 통하여 저임금에 기초한 생산을 지속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생산된 소비재 상품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과 한국이 군사외교 동맹 관계를 만들면서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한 경제 혜택의 하나였다. 직접적인 경제원조나 군사원조와는 달리 시장 개방이 보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수출주도형 산업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수출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가 수출 대상국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장 먼 미국이었던 이유가 바로 냉전체제이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역사 이래 가장 먼 원거리 무역이 45년 이후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루어졌다.

한국 경제의 위기

냉전체제의 붕괴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게 특별한 무역상의 혜택을 철회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냉전체제하에서 한국에게 부여하였던 군사적 정치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한국에게 부여하였던 최혜국 대우를 1989년 철회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더 이상 미국 시장에서 과거에 누렸던 관세혜택을 누릴 수 없었으며, 중국

이나 동남 아시아 제품들이 미국의 가격경쟁시장에 진입하면서 한국 상품들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중국이나 동남 아시아의 임금이 한국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그 곳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가격이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보다 더 낮아서 점차 중국이나 동남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미국의 가격경쟁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한국 기업들의 위기는 바로 한국에서 노동운동 활성화로 인하여 과거와 같이 저가 생산이 불가능해지면서 미국의 가격경쟁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9년 동구권 붕괴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경쟁력 상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동구권 시장으로 접근이 가능해졌고 1991년 중국과의 수교로 중국 시장이 확보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린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도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고 더 이상 확장되지 않으면서 기술 혁신에 기초하지 않은 한국 기업들의 상품들이 국제시장에서 설자리를 잃어 가게 되었다.

한국 자본주의 위기는 바로 권위주의 체제 밑에서 성장한 대재벌에 의해서 촉발되었으며,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반을 두지 않은 기업들의 한계를 대표적으로 드러낸 결과였다. 이것은 동구권 기업들의 낮은 생산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동구권 경제의 몰락은 바로 연성 예산제약형 기업 체제에서 유래한 것이

며, 한국의 경우도 동일한 기업 유형에서 유래한 것이다. 독재 체제하에서 보호받고 혜택을 누린 대재벌들이 차입을 통한 문어 발식 기업 확장을 통하여 대규모 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거대한 공룡이 된 셈이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현재 한국자본주의 위기는 권위주의 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 위기의 유일한 극복 수단이다.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면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

면서 이루어진 부당한 축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권위주의 국가는 단기적인 경제성장에 급급하여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억압한 채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기업 혁신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였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방식은 대단히 모순적이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정치 체도가 모든 사회 성원들에게 동일한 정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경제 수준에서 존재하는 불평등이 정치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선거의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자본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제도인 것

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통하여 자본의 쉬운 선택인 '노동력 착취를 통한' 축적을 막는다는 점에서 자본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축적을 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운동

을 합법화함으로써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력 착취' 대신 '기술 혁신'을 통한 축적만을 허용하였다. 슈페터나 맑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 드러나는 자본가의 역할은 바로 혁신을 통한 무한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역할이었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측면은 역사적으로 남녀평등과 같은 사회 수준에서의 민주주의를 포함하고 있다. 남녀평등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시켜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 인적 자원을 최대 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다. 모든 조건이 같다면, 전체 인구 가운데 노동력 인구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민주화가 심화될수록 여성들의 권리도 신장이 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도 모든 부문에서 증가하여 왔다. 그 결과 남녀평등이 진척되면 될수록 주어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체제가 된다.

현재 한국자본주의 위기는
권위주의 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 위기의
유일한 극복 수단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 자본주의는 국가 주도로 발전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이다. 권위주의적 동원으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주로 투입 부문의 양적 확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 경제는 초기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본과 노동의 집중적인 투입(input)을 통하여 기술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출(output)은 자동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투입의 증가분만큼 산출도 증가한 셈이다.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여 제도적 합리성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고, 그 결과 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와 같이 학연, 지연, 혈연이 일상생활에서 크게 작용하는 경우 개인 인고로 일의 성사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과 무관하게 특징한 조건이나 요구만 있으면 합리적으로 일이 처리되는 서구와는 달리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주무 관청이나 정치권과 개인적인



민주화가 심화될수록 여성들의 권리도 신장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도 모든 부문에서 증가하여 왔다. (여성노동자를 조직하는 프랑스로버트운동원(CGT) 활동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이 보다 빨리 처리된다. 그리고 능력에 관계없이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직은 조직 자체의 필요와 요구가 아니라 조직 외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경우 체제의 비효율성을 낳은 요인은 남녀차별이다. 예를 들어 최근 정부에서 공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인 17조이었고,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약 20조로 추산되었다. 전체 교육비로 지출되는 돈이 37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약 반이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비용으로 간주한다면 약 18조 5천억원이 매년 여성들을 교육시키는데 소요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 교육시킨 여성인력이 여성차별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이는 한국사회가 약 18조 5천억 원을 매년 낭비하고 있는 셈이 된다. 여성차별 자체가 한국사회를 비효율의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기 못하여 여성차별이 강하게 남아있고 그 결과 한국사회는 엄청난 낭비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생산성은 투자된 비용과 산출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추산할 수가 있지만, 한 사회의 효율성은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인하여 추산하기 힘들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전혀 비용으로 잡히지 않는 자원이 사회 전체 수준에서는 큰 비용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사회체제보다 효율적이라는 논리는 기업 차원의 효율성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의 효율성을 촉진시킨다는 점에도 근거한다.

**일시적인 개발 독재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극심한 경제 침체와
불황을 낳은 요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도 민주주의 심화라는 점에서
주지할 필요가 있다.**

서구 사회가 한국보다 훨씬 노동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득 수준과 복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생산에 도입된 높은 기술력 뿐만 아니라 체제의 높은 효율성에도 기인하고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약 35시간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1시간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서구 사회 전체 수준에서 제도의 합리성과 체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서구 사회들은 한국 사회보다 훨씬 높은 경제적인 복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커다란 기로에 놓여있다. 한편으로는 IMF 체제로 요약되는 한국 자본주의 위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50년만에 이루어진 정권교체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진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변화가 한국 사회의 경제 발전에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요한 점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심화가 경제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한

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개발독재를 통하여 성장한 경제체제인 경우 "연성 예산 제약형 기업"의 발달로 인하여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외부 차입을 통한 양적인 팽창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기업간 경쟁도 생산성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산성이 대단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어발식 팽창이 가능하였다.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외부 자원이 국가로부터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도 기업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권위주의 체제에서 성장한 기업은 급격히 변화된 세계 경제 조건에서 그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주주의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기업이 국가에 의존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혹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과 같은 노동력 착취를 통하여 성장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이외의 방법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더욱더 불가능해진다. 노동인권을 유리하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정경유착을 통하여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가 심화되면 제도의 합리성이 증가하고 체제의 효율성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민주적 자본주의하에서 민주주의의 발달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핵심적인 제도적 선행조건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개발

독재'에 대한 향수를 갖는 일부 보수세력은 오늘날 한국 경제의 위기가 바로 개발독재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독재체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구조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폐해를 낳았다. 일시적인 개발독재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극심한 경제침체와 불황을 낳은 요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도 민주주의 심화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적 개혁은 제도의 합리성과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히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제 민주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취해야만 할 숙명적 과제가 되었다. 김영삼 정부처럼 민주 개혁을 미루는 경우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며 그로 인한 경제 침체와 사회 혼란은 더욱 오래 지속될 것이다. 권위주의 잔재의 청산과 민주주의 심화만이 한국사회가 21세기를 맞이해서 이룩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인 셈이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처방을 찾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처방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근원적인 질병은 바로 개발독재의 후유증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